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아세안 정상들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30년 미래 협력 청사진 제시

文 대통령, 한·아세안 정상회의 제1·2세션 모두 참석 기존 신남방정책 평가·아세안 국가와 양자 FTA 추진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공동의장 성명 각각 채택 한·아세안 정상, 한반도 특별세션 주제 업무 오찬 참석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됐다. 대화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다자회의엔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 아세안 사무총장이 모두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 빠랏트 전총리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30x30' 주제로 열린 제1세션 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1989년 대화 관계 수립 이후 지난 30년간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했다.

앞으로의 30년도 한국이 아세안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한·아세안 관계가 지난 30년간 교역은 20배, 투자는 70배, 인적교류는 40배 이상 크게 늘어 이제 한국과 아세안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됐고, 함께 미래를 열어갈 동반자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가 신남방정책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향후 30년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비즈니스센터 설치 등 비자제도 간소화 ▲한·아세안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 2배 이상 확대 ▲한·아세안 센터 및 아세

안 문화원 지원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 ▲한·아세안 산업 혁신기구 설립 ▲2022년까지 무상 ODA 규모 2배 이상 확대 ▲아세안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해 경제협력이 역내 평화를 추동하는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 공동체'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연계성 증진' 주제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아세안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연계성 증진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계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아세안이 2016년 발표한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표명했다. 또 2018년 출범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강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코타키나발루 스마트시티 구축 시범사업과 이번 정상회의의 계기 출범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를 통해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생산현장 기술으로 지도사업(TASK)

등을 통해 인적 교류 측면에서도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음도 언급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지난 30년간 한국이 아세안 주도 지역협력체에 적극 참여해 역내 안정과 발전에 기여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통해 향후 30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결과문서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동의장 성명'을 각각 채택했다.

공동 비전 성명은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미래 3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 비전 제시, 신남방정책 기반 미래 협력 방향 등이 담겨 있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종합하는 성격인 공동의장 성명에는 정상간 논의 내용과 한·아세안 분야별 협력 현황, 정상회의의 구체 성과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후 정상들은 '한반도 특별세션' 주제로 진행되는 업무 오찬에 참석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세션이 마련됐다.

청와대는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관련해 "신남방정책을 중간 결산하고 미래 30년을 향한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불필요한곳에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필요성 철저히 검증해야”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 실시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26일,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본예산 심사 관련,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나인권의원(김제2)은 도시공원 내 폭염저감 시설물 설치 관련, 도내 노인세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재,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의 무더위 예방을 위해 폭염저감 시설물 설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태인육교 철거사업과 관련, 현재 육교 자체가 크게 노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태여 지하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육교철거에 많은 도비가 편성되어야 하는지 질의하며, 전반적인 사업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김대오 의원(익산)은 세입관련, 지방도로 사용료와 도로법위반 과태료의 세입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특히 과적차량 운행 집중 단속으로 포트를 방지 및 도로기능이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트공간 조성 관련, 2018년의 경우, 전북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여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긍정적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현재는 전북에서 개최되는 큰 행사가 없는 만큼 위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외부가 아닌 도민 편의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사

업규모 17개지구 중, 계속사업 7지구 및 신규사업 5지구인 것과 관련해 계속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계속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자체가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상지구를 축소하여 각 지구가 마무리되면 신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들이 지방도 공사로 인해 교통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하천 기본계획 수립 등 계획수립을 위한 의무영역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행정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그 외 하천준설이나 정비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진성기자

김기영 도의원, 체력검증 회피 소방공무원 엄중 처벌 촉구

전라북도의회 김기영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은 "소방공무원들은 1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체력검증을 실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성 진단서 제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년간 2017년 115명, 2018년 121명, 2019년 139명 등 총 375명이 3주 미만의 진단서 제출로 체력검증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김 의원은 "예산안을 보면 매년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구조구급대원은 별도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평소 대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본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유독 체력검증 때가 되면 아픈 대원이 늘어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영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소방공무원은 평소 체력과 건강관리에 힘써야 하고 체력검증을 통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건강에 이상이 없음에도 체력검증을 받지 않는 행위는 도민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농산업경제위, 혁신성장산업국 예산 심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26일 제368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에 대한 2020년도 본예산안 및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혁신성장산업국 2020년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61억 1,865만원 증가한 407억 2,731만원 규모로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18억 1,000만원보다 613억 1,162만원이 증액된 1,531억 2,162만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예산편성 과목 오류 시정 및 간접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내역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김철수 부위원장(정읍1)은 도내에 보유한 연구개발 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사업과 장비구축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에 신규 장비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중복우려, 예산낭비,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오광근 의원(전주2)은 탄소산업이 예

산대비 성과가 나타나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분야지만, 현재 시제품 부족 등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로드맵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영심 의원(비례)은 1억원을 들여 탄소밸리 토탈 허브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관리 운영과 탄소융합기술원 홈페이지 중복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예산의 방만한 운영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했다.

황영석 의원(김제1)은 연구원의 지방 근무 기회해소를 위한 R&D기관 연구원 주거비 지원의 실효성을 제기하고, 단순 주거비 지원 외에 안정적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진성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